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

2019. 1. 17.(목) ~ 1. 28.(월)

행정자치위원회

2019 주요업무보고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순서

◆ 기 획 조 정 실	1
◆ 시 민 안 전 실	23
◆ 자 치 분 권 국	37
◆ 문화체육관광국	51
◆ 소 방 본 부	71
◆ 대 변 인	85
◆ 인사혁신담당관	95
◆ 감 사 위 원 회	107
◆ 인 재 개 발 원	121
◆ 대전마케팅공사	131

기획조정실

I. 일반현황

II.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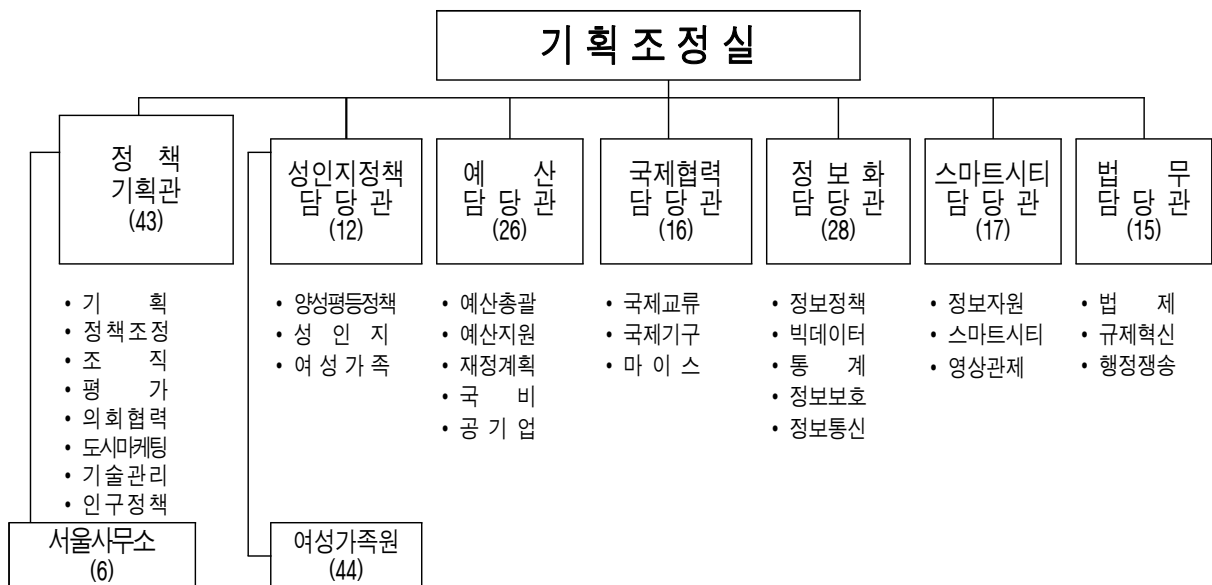
III.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I . 일 반 현 황

① 실 · 국 · 단의 기능

- 시정 종합기획·조정, 대정부·국회 협력, 열린혁신·실국간 조정, 행정기구·조직 관리, 평가, 시의회 운영 협력, 도시브랜드 추진, 건설기술 심의, 인구정책 수립
- 양성평등정책 개발 추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여성정책, 건강가정
- 예산편성, 기금지방채, 중기재정계획 및 국비 확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총괄
- 국제교류종합추진, 외국인정책, 국제전시컨벤션센터, MICE 산업 추진, WTA 지원
- 정보화 기획, 공공빅데이터 추진, 통계행정·조사,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관리
-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리, 지역정보통합센터, 스마트시티 및 공간정보, CCTV통합관제
- 법제행정 종합 조정·심사, 규제혁신 종합 기획·조정, 행정심판소송, 소청심사

② 조직 및 인력 : 1관 6담당관 30팀, 2사업소(정원 207명) * 국가직 1명 포함



③ 2019년 예산현황 : 총 492,424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정 책 기 획 관	성 인 지 정 책 담 당 관	예 산 담 당 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정 보 화 담 당 관	스 마 트 시 티 담 당 관	법 무 담 당 관	서 울 사 무 소	여 성 가 족 원
예산액	492,424	8,257	27,469	397,850	36,512	5,928	8,209	468	771	6,960
비 율	100	1.7	5.6	80.8	7.4	1.2	1.6	0.1	0.2	1.4

《 2019년 대전광역시 예산규모 》

총 5조 7,53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3조 8,455억 원 • 특별회계 — 9,084억 원 • 기 금 — 9,991억 원
-------------	---

※ 2018년 5조 2,458억 원 대비 5,072억 원(9.67%)증가

○ 일반회계 세입내역

자체 자원 : 16,020억 원(41.7%)	의존 자원 : 20,538억 원(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15,043억 원(39.1%) • 세외수입 977억 원(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11,338억 원(29.5%) • 지방교부세 9,200억 원(23.9%)
지방채 : 400억 원(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1,497억 원(3.9%)

※ 지방채 추이(총괄)

(단위 : 억 원)

2017년말	2018년 실적		2018년말	2019년 계획		2019년말
	발행	상환		발행	상환	
6,283 (4,809)	720 (700)	1,061 (881)	5,942 (4,628)	1,100 (700)	1,181 (966)	5,861 (4,362)

※ ()는 지역개발채권 표기

○ 일반회계 세출내역

〈 기능별 〉

• 지역경제	3,538억 원(9.2%)
• 사회복지	15,469억 원(40.2%)
• 보건·환경	1,674억 원(4.4%)
• 문화·관광·교육	5,014억 원(13.0%)
• 수송·교통	3,496억 원(9.1%)
• 일반공공행정	9,264억 원(24.1%)

〈 성질별 〉

• 인건비	1,833억 원(4.8%)
• 물건비	917억 원(2.4%)
• 경상이전	25,051억 원(65.1%)
• 자본지출	4,501억 원(11.7%)
• 보전재원	206억 원(0.5%)
• 내부거래	5,364억 원(13.9%)
• 예비비 등	583억 원(1.5%)

* 지역경제(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및지역개발), 보건·환경(보건/환경보호), 문화·관광·교육(문화관광/교육), 일반공공행정(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및안전/예비비/기타)

Ⅱ.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2018년에는

민선7기를 이끌어 갈 비전과 목표 설정,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아·태 범죄 통계 협력센터’ 유치 등 「새로운 대전」 건설을 위한 성공적인 첫 발걸음

2018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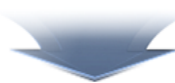
- 민선7기 시정비전과 정책의 국정 연계, 미래 성장 동력 발판 마련
 - ▶ 슬로건·핵심가치 설정(‘18.8월), 5대 분야 93개 약속사업 확정
 - ▶ 2019년 국비 3조 611억원 확보(전년대비 8.5%↑)로 재도약 전기 마련
 - ▶ 민선7기 가치 실현을 위한 내적 쇄신(조직 개편), 협치 시정 기반 조성
- ‘국제도시 대전’으로 위상 제고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
 -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본격 추진, 과학산업 관련 도시와 협력 확대(32→34개)
 - ▶ WTA 창립 20주년 국제행사 참여(‘18.10월/25개국 2,000여명), MICE 개최(389건)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로 재도약, 빅데이터 기반 시정 추진
 - ▶ 기관간 연계·협업에 의한 서비스 확대(‘18.12), 긴급상황 CCTV영상 지원(3,655건)
 - ▶ 인공지능 빅데이터시스템 도입(3억 원), 버스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추진(‘18.11/사업자 선정)
 - ▶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유치(준국제기구, 4년간 약 20억 원 국제부담금 투입)
- ※ 2018 월드 스마트시티워크 스마트시티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장려),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2018’ 공공부문 지자체(대상)

2019년에는

민선7기 본격적인 출발, 국정기조와 연계한 미래먹거리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대전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 확보에 행정력(조직 대내외) 집중

정 책 환 경

- ▶ 저성장과 양극화의 가속화로 ‘포용국가’로의 사회적 통합이 강조
- ▶ 경제민생문제 체감성고가 국정동력으로 연계, 혁신성장 등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
- ▶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재정혁신 추진이 예상



2019 정 책 방 향

- ▶ 국정기조와 민선7기 핵심가치 동조화에 중점, 정책개발 등 역점 추진
- ▶ 민선7기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조직으로 안착, 양성평등문화 확산
- ▶ 외교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국제교류 정책 반영, 다자간 교류 활성화
- ▶ 시민체감형 공공 스마트서비스 확대, 4차 산업혁명선도도시로 자리매김

Ⅲ.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새로운 대전」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2.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 조성
3. 주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영 강화
4.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
5.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
6. 스마트하고 새로운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7. 시민 중심 자치입법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8. 여성 취·창업 교육 및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1. 「새로운 대전」을 위한 기획·조정기능 강화

- ◇ 민선7기 본격적인 출발, 대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먹거리 발굴에 총력
- ◇ 대내외 환경에 대응한 적극적 체질 개선,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역량 집중

① ‘새로운 대전’을 이끌어 갈 기획 역할 강화

- (국정기조 대응)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 신년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국비·공모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 대응
 - － 주요 역점과제 등 현안사업 관리 점검 강화(현안점검회의 등)
- (대외 공조 강화) 국회·정당·중앙부처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5월, 10월)
 - － 대전시-지역-당-자치구 간 당정협의회 정례화로 협력체계 구축(분기별 개최)
- (정책개발 집중)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동력 발굴 및 정책과제 개발
 - － 중장기 발전계획 ‘새로운 대전 그랜드플랜’ 수립(대전세종연구원)
 - － ‘새로운대전위원회’ 자문 기능 강화, 직소제안·시민제안 실시 등 정책과 연계 노력

② 조직혁신 및 정책조정 기능강화로 혁신성장 밑거름 확보

- (행정혁신) 일하는 방식 등 조직 전반 혁신, 신뢰받는 시정 구현
 - － 일하는 방식 개선, 인사 혁신, 불합리한 관행, 조직문화 개선
 - － 기관·부서 간 협업, 민·관 협력, 사회적 난제 해결 및 조정, 정책혼선 최소화
- (정부혁신) 시민주권시대, 보다 나은 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 전개
 - － 시정 분야별 혁신 실행과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시행, 시민 공감 시정 구현
 - － 민관협의회 및 혁신지원그룹 운영,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정책박람회 등 추진
- (혁신성장) 시도지사협의회·중부권정책협의회 등 공조체계 강화, 지역혁신 선도
 - － 정부정책 대응, 지역현안 사항 공동건의, 상생과제 발굴 추진 등

③ 시정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 (조직운영) 지역현안 및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
 - － 국가 정책 및 시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
 - －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실시로 수탁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한 경영 유도
- (인력운영)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안수요에 시의성 있게 대처하는 인력운영
 - － 공통·쇠퇴기능 축소, 업무 비효율 제거 등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 재배치
 - －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인력운용

④ 객관적 평가·환류의 선순환 체계로 시정비전 실현

- (약속사업 총괄관리) 투명한 평가환류 및 객관적 성과진단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주기적 이행상황 자체 확인·점검, 성과평가 반영 및 시민평가제도 운영
 - * 17개 브랜드사업을 중심으로 5대 분야 93개 약속사업 이행상황 관리
- (성과평가 기능강화) 핵심전략 성과관리 및 협업환경 조성으로 조직경쟁력 제고
 - － 시정목표와 비전, 협업과제 및 정부 정책과제 등 전략과 성과지표 간 연계성 강화
 - － 민선7기 주요정책 연계 지표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외부전문가 평가 등 체계적 관리
- (시정점검 확행) 지역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수시 확인·점검으로 실행력 확보
 - － 시민과 현장의 소리 경청, 추진실태와 문제점 분석으로 개선방안 모색
 - － 주요현안, 쟁점 및 기타 당부사항에 대해 시정점검 피드백을 통한 집중관리
- (외부평가 대응) 국정과제 및 정책여건 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정역량 강화
 - － 국·시정 정책과제의 연계 추진을 위한 사례 발굴부터 성과도출까지 집중 관리
 - － 변경된 평가체계에 적극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전략 수립 추진

⑤ 차별화된 도시마케팅으로 경쟁력 강화, 대전 정체성 확보

-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발굴) 파워브랜드 선정, 대전도시마케팅 중장기 전략 마련
 - － 정치, 경제 등 거시적 환경, 대·내외 현황분석으로 도시마케팅 다각적인 전략 마련
 - 파워브랜드 선정('19.1월) → 파워브랜드 적용할 사업 발굴('19. 상반기) → 사업시행 ('19. 하반기)
- (전략적 도시마케팅)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중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파워 브랜드 스토리 작성
 - － 대전브랜드 Pool을 활용한 제품 제작으로 지속적인 도시브랜드 홍보
 - 컨셉 및 디자인논의 → 샘플제작 → 본제품 제작 / '19. 2~'19. 4(약 3개월)
 - － 잠재력 있는 파워브랜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홍보
- (7030 기념사업) 대전방문의 해와 연계한 다채로운 기념사업 추진
 - － 4대 분야(대전 발자취, 미래비전, 상징, 시민참여사업) 14개 사업 본격 시행

⑥ 안전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문화 조성

- (건설기술심의 내실 운영) 대형공사 안전시공 등 시민 만족도 향상
 - －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의
 - ※ 2018년도 실적 : 21회 10,118억원
- (설계의 경제성(VE)검토) 건설공사 예산절감 및 공공시설 가치향상
 - ※ 2018년도 실적 : 10건 279억원 절감(8.8%)
- (용역관리 강화) 용역심의·평가 강화로 예산절감 및 활용도 제고
- (대형공사 시공평가 및 점검) 대형공사 시공평가(100억 이상) 및 지도점검(50억 이상), 교량 등 복합공정 감리가 필요한 사업 일부 자체감리 시행

⑦ 인구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인구정책 추진

- (정책개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사업 발굴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
 - － 중앙 공모사업과 연계, 도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수립
- (인식개선) 출산·양육에 대해 고귀한 가치부여 및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
 - －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민관협력) 시민단체·기업·지자체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 운동 전개
 - － 정기회 및 간담회 개최, 공동 캠페인 활동,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운영 등

2.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 조성

-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력 및 지원체계 확보
-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및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① 시정 전반의 성평등성 강화로 시민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 (성별영향평가 강화)시정 전반의 성평등성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확대
 - － 시장 약속사업 및 주요정책 등 특정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추진
- (성인지 교육 강화)시민·공무원의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강화
 - － 시민·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통해 양성평등 가치 확산
- (양성평등 문화 확산)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하고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
 - － 시민참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지속 관리, 여성인력풀 구축

② 경력단절여성 역량 개발 및 사회복귀 환경조성

- (전문 취업 상담)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 － 전문 취업 상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알선, 취업 이후 성공적 적응 지원
- (맞춤형 직업교육)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역량 개발 적극 지원
 -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발굴 운영
- (경력단절 예방)경력단절 예방상담컨설팅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기능 강화
 - － 노무사,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 정보제공 및 고충상담 컨설팅 지원

③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및 인권보호 정책 확대

- (건강가정 지원)아이돌봄사업 확대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활성화
 - － 아이돌봄지원(긴급돌봄포함)사업 확대 및 취약위기가족지원·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 (취약계층 자립지원)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시설아동 돌봄서비스 신규지원
 - － 양육비 지원대상 14세→18세, 지원금액 13만원→20만원으로 상향 지원
-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폭력예방 교육 및 피해자 유형별 맞춤 지원으로 인권보호 강화
 - － 폭력예방 교육 내실화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형별 지원 강화

3. 주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영 강화

- ◇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 ◇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선제적 대응 국비확보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①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

- (계획적 투자) 주민 숙원 및 경제 활성화 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재정 뒷받침
 - －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선순위 사업에 우선지원 등 재원의 전략적 배분
 - －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복지 강화
 - －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합리적 재정운용)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예산의 건전성·합리성 제고
 - －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 등 예산 누수 방지
 -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

②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예산 실현

-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자치구 상호간 합리적 재원 조정과 균형발전 도모
 - － 자치구 재원 확충 및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완화로 재정 불균형 해소
 - － 지역현안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시·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로 소통창구 및 주민자치 실현
 - － 지방재정법 개정(‘18.3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을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까지 확대
 -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 － 제7기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19.7월) 및 확대 추진(50~70명 → 100~120명)
 - * ‘18.11월 기준, 대구(100명), 광주(100명), 울산(70명)
- (기금·채무관리) 효율적 기금운용과 채무 감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 유사기금 통·폐합 및 목적달성기금 폐지 등 기금운용개선 지속 추진
 - － 채무비율 ‘16년 13.3% → ‘17년 11.9% → ‘18년 10.6% → ‘19년 10.0%로 감축

③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 (계획적 재정운영) 중복 투자 방지 및 타당성 제고로 재정 효율화
 - － 중기계획을 통한 재원의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용의 합리성 확대
 - －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등 투자심사 내실화
- (적극적 재정집행) 예산의 신속·효율적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일자리 및 SOC사업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집행을 집중, 경제 활력 도모
- (재정투명성 확대) 시민 참여에 의한 단일한 예산집행 방지 및 재정 건전화
 - －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 활성화로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강화
- (꼼꼼한 보조금 관리) 철저한 보조금 심사·운영평가로 보조사업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 보조금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보조금 심의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④ 2020년 국비확보 전략적 대응

- (초기 대응) 2020년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 및 정부안 반영 노력
 - － 정부계획과 연계된 신규 사업 및 예타 대상 사업 발굴
 - －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중앙부처 동향관리(예산편성방향 분석)
 - － 지방교부세(보통·소방안전·특별교부세)의 확보 활동 강화
- (공조체계 강화) 지역 국회의원과 정파를 초월한 공조체계 유지
 - － 지역연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국비확보에 효율적·탄력적 대처
 - － 정부안 반영부터 국회의결까지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⑤ 시민 중심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실현

-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 공익성(사회적 가치)과 효율성 간 균형 있는 경영
 - － 시민이 함께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시민의 체감도 제고 및 공공성 회복
 - － 경영평가지 사업활동성과 및 경영효율성과 지표와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균형 유지
 -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 윤리경영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
-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관 및 기관장 평가로 경영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목표 평가를 통한 차등 인센티브 지급
 - －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현장성을 반영한 조직 역할 정립
 - * 조직진단 실시 및 결과 반영, 기관별 조직내·외부 자발적 혁신 추진, 실적평가

4.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

- ◇ 국제네트워크와 국제교류 활동 확대강화를 통해 대전의 국제역량 강화
- ◇ 대전국제전시컨벤션 건립과 마이스 산업육성으로 미래의 먹거리 창출

① 자매우호교류 등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외방문객 유치

- (자매·우호교류 확대)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자매우호도시 교류확대
 - － 민간단체교류 확대강화를 통해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 민간단체 자매우호도시 교류 지원, 자매우호도시 주요행사에 시민 동행 참가 등
 - －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주요행사에 자매·우호도시를 초청하여 행사 확대
- (시민 역량강화) 다양한 국제교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국제역량 강화
 - － 시민의 국제역량 강화 사업과 민간단체 주관의 다양한 사업 지원
 - 시민 글로벌 스터디그룹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 (국제교류센터 활성화) 자매우호도시와 민·관 국제교류의 중심센터 역할 강화
 - －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민간주도 국제교류체계 구축
- (공공외교 확대) 대전의 이미지 제고와 국제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 추진
 - － 시 산하 전 분야를 총괄하는 공공외교시행계획 수립 시행

②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외국인주민 삶의 질 개선

-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추진) 외국인주민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용역추진('19 상반기)을 통해 설립·운영 방향 설정
- (외국인 정착지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 － 외국인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
 - 외국인시정참여회의, 거주외국인지원자문회의 실질적 운영
 - －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시켜 대전시의 이미지제고
 - 한국어교실 운영, 외국인유학생 체육대회, 세계인어울림한마당 개최 등

③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다자간 실리적 협력확대 강화

- (국제행사 유치) 국제기구 총회(회의) 유치로 시 주요시책 공유 및 진출강화
 - － 국제기구행사 적극적 참여를 통해 총회(회의) 유치 및 주요 임원진출 등 다각 모색
 - ＊ (2019 주요행사) UCLG WORLD총회(남아공 더반), APCS(호주 브리즈번)
- (협력관계 강화) 관내 주요 국제행사 초청 등 해외 국제기구와 협력의 장 마련
 - － 2019 WTA 국제행사, 사이언스페스티벌 및 대전방문의 해 행사 등
- (ODA추진체계 확립) ODA추진 기본계획에 맞춘 세부실행사업 발굴추진
 - －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5개년 기본계획수립 시행
- (2019 WTA국제행사 개최) 과학기술혁신 전과 및 개도국과 상생 발전계기 제공
 - － 세계혁신포럼, 하이테크페어 및 U-W 공동워크숍 개최
 - － 북한 첨단과학도시 WTA행사 초청 및 대덕특구 시찰 등

④ 대전MICE 산업 인프라 확충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다목적전시장 건립을 통한 중부권 마이스 산업 견인

사업 개요	• (개요) '17~'21 / 40,970㎡(전시장10,020㎡, 부대시설10,350㎡, 주차장20,600㎡)
	• (예산) 954억 원(국비 286, 시비 668)

-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술제안자 선정,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철저
- (일자리 창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첨단기술, 국방, 과학도시 행사 개최 및 국제회의 유치* 등
 - ＊ 2019년 MICE 산업 유치 목표 : 국내·외 행사 개최 497건, 국제회의 유치 88건
- (MICE산업 육성) MICE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 확립
 - － MICE 서포터즈 교육, MICE 아카데미 및 우수자 인턴십 운영 등
 - － 국제회의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 추진
 - ＊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58백만원)

5.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

- ◇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 행정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개인정보보호·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

① ‘빅데이터 대전 브랜딩’을 위한 기반 마련

- (조례 제정 및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화 지원, 빅데이터센터 설치 근거 등 제정
 - － 산·학·연·관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20명 이내의 민관합동위원회 설치·운영
-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차별 전반적인 시정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추진
 - －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 실천을 위한 연차별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
 - * '19년 복지 ⇒ '20년 안전/환경 ⇒ '21년 교통 ⇒ '22년 문화/관광 등 '26년까지 추진
 - － 시 방문의 해 관련 관광활성화,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분야 빅데이터 분석 실시

②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서비스 확산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업무시스템(시도행정, 전자결재 등) 안정적 관리
 - － 내부 행정업무용 시스템의 장애발생 예방, 재난·재해 대비 모의훈련(연1회) 실시
- (웹서비스 기능 개선)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와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고
 - － 사업별 추진하는 특화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기능개선
 -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정책제안, 대전 치유의 숲, 이츠 대전 등 10개 사이트
 - － 대표홈페이지 및 개별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정보화 역기능 해소
 -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찾아가는 ‘스마트 씬 센터’ 운영
- (정보격차 해소) 정보소외계층의 지원강화를 통한 정보화 불균형 해소
 -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130대), 사랑의 그린PC 보급(160대)
 - － 장애인·고령자 집합 정보화교육 실시(1,224명)

③ 체계적인 정보보호 운영으로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
 -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 1일) 및 PC내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실시
 -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수시) 및 PC내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6월)
- (정보보호 강화)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보호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긴급구조시스템 외 4개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1회)
 -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및 PC 보안취약점 조치
 - － 차질 없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망간자료전송시스템 이중화 구성 추진
- (사이버침해 대응) 사이버위협 분석체계 강화 및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 －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연 2회), 정보보호시스템 도입(DDos 대응시스템)
 - － 중요 정보시스템 서버 및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실시(연중)

④ 다양한 행정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생산

- (주요통계 생산) 정책수립 및 시책발굴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발간
 - － 통계연보, 시정주요통계, 지역내총생산, 성장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 － 고령화 사회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베이비부머통계(1955~1963년생)
- (사회·경제 통계조사)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모습을 반영한 통계지표 제공
 - － 사회조사(5천 가구), 사업체조사(12만 여개 업체) 등 국가승인통계 생산
- (통계자료 디지털 관리) 시민의 시정통계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 체계적인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분야별 DB 및 시각화 시스템 서비스

⑤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화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산

- (정보통신 기반시설 안정화) 정보통신 시설 예방점검 강화로 안정적인 관리·운영
 - － 인터넷 전화시스템 등 10종(3,516대) 중 노후시스템 교체 추진
 - 네트워크 시스템(L2 스위치 56대) 및 인터넷 전화시스템(서버 2식) 등 교체
 -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행정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시 본청 외 30개 기관
- (정보통신 민원 신속처리)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정보통신공사업 관리
 - －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규, 변경 등 민원사무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상시 점검 / 10개 기관(434개소)
 - － 정보통신공사업체(363개) 관계법령 준수 지도점검(연 2회) 및 우수업체 표창(4개 업체)
-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산) 시민 통신비 절감 및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 우리시 모든 시내버스(1,030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 － 다중이용시설 및 소외지역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300개소 확대 설치

6. 스마트하고 안전한 시민서비스 제공

- ◇ 새로운 스마트서비스 발굴로 대전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마련
 - ◇ 지능형 통합관제로 시민안전 강화 및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안정적 운영
-

①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와 장애 없는 정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 통합운영)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안정적 서비스(14부서 1,136대)
 - － 상시 모니터링,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복구(모의훈련 2회), 용역수행보고(매월)
- (보안 강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암호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 내부행정망 및 인터넷 등 5개분야 322대 서버 패스워드 체계적 관리(4월)
- (정보자원 효율화) 가상화시스템 공동 활용 등 정보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 －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및 신규시스템 구축 시 가상화서버 활용 지원
- (자료 관리) 주요 전산자료에 대한 통합백업 및 복구 체계 유지
 - － 정보시스템 저장 자료의 주기별 · 원격지 백업과 분기별 소산(인천)
 - － 통합백업 체계 강화를 위한 자료보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4월)

②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시민안전 서비스 확대

- (스마트시티 정책 및 기반 구축) 대전 특화형 스마트시티 전략사업 발굴 및 조성
 - －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 종합적 정책 마련 및 경쟁력 확보
 - * '19년 : 현황분석, 시민인터뷰, '20년 : 전략도출, 국토부 승인 / (기준) '19년, (계획) '20년 ~ '24년(5개년)
 - －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스마트시티 붐 조성
 - *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기획사업 공모 예정('19년 6개 기관 선정, 각 15억원 국비지원)
- (시민안전 서비스 확대) CCTV를 활용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 －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구축
 - * 민간보안 및 공공안전 연계, 위험시설물 보호 지원서비스 실시(2월)
 - 전자발찌·피해자보호 서비스 구축(12월)

③ 공간정보 서비스 이용활성화 추진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개선) 행정·공간정보 융복합으로 과학적 행정지원 도모
 - － 통합 공간정보 기반에서 행정정보 연계 분석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극대화
 - ＊ 인허가 민원 의사결정, 누락·탈루세원 발굴 지원 등 업무활용 고도화
 - 사용자 맞춤형 환경제공, 도시공간정보 체계적 반영 및 현행화 등 기능개선 추진
- (자하시설물관리 시스템 운영확대) 자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이중굴착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 (기존) 건설관리본부, 동구, 중구 운영 → (확대)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점진적 시행
 - ＊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1월), 사용자 교육(연2회)

④ CCTV 관제운영 강화 및 연계서비스 확대

- (관제효율 향상)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로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
 - － 관제센터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 CCTV 증가에 따른 관제요원 증원(10명 증원, 63→73명)하여 관제범위 강화
- (스마트관제 구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관제시스템 운영
 - － 지능형 선별관제서비스(CCTV 128대) 시범운영 및 안정화 추진
 - － 폭력·화재 감시 CCTV영상분석시스템 시범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 서비스 향상
 - － 스마트 영상검색 시스템 운영으로 경찰 영상 검색 및 시민 정보공개 처리 개선

⑤ 자가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 체계적 관리

-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 시 행정용 임차회선을 초고속 자가망으로 구축
 - －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19년)
 - － 시-구-주민센터 간 초고속·광대역 자가통신망 연차별 구축('20 ~ '22년)
- (국가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 관리 강화
 - － 센터 ↔ 본청·사업소·자치구 52회선 /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7. 시민중심 자치입법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 ◇ 민선7기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응하는 입법역량 강화
- ◇ 규제혁신과 권익구제 강화로 경제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① 시민중심의 자치입법권 확대

○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 발굴·정비

- － 지방분권 확립에 필요한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 －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
- － 토론과 공정한 심의를 통한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 (입법지원 역량강화) 입안단계부터 다양한 입법지원으로 법제역량 강화

- － 법제심사 3심제 운영으로 부실 입법 및 오류 발생 최소화
 -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상 의문에 대한 적극적 의견제시 및 상담
- － 자치법규 제정·개정시 법령안 편집기 활용 의무화로 법제업무 편리성 제고
- －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위임 자치법규 정비대상 발굴·전파
- － 입법담당자 중심의 실무교육 실시로 자치법규 입법 수준 향상
 - 전문가 활용한 실무중심 맞춤형 법제교육 및 법제처 실무교육(법령안 편집기, 판례 등)

○ (입법관리 강화) 자치법규 입법 부실 및 지연 부서에 대한 관리 강화

- － 자치법규 입법대상 및 정비결과 부서 성과관리(BSC) 평가(감점) 반영
 - 입법계획 기간 내 미정비, 입법지연, 부실 입법안 제출 등
- － 정부합동평가 대비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을 위한 부서 및 자치구 독려
 - 법제처에서 통보된 필수조례 정비 실적 점검 / 자치구 포함

○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 상담터(변호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규제개혁

- (현장중심 규제개혁)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미비(부재) 사례 발굴과 해소 중점
 - － 네거티브(입법방식·규제샌드박스), 혁신 테마별 맞춤형 과제 해결
 - － 행정서비스 접근성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규제애로 및 생활속 현장 사례 중심의 규제애로 발굴 / 시·구 합동 정례 방문 및 고충상담
 - －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 수렴을 통한 민생 규제의 상시 발굴
- (분권형 규제시스템 구축) 등록규제 정비 및 분권형 규제개혁 추진
 - － 조례·규칙 등 중앙 등록 행정규제 수시 정비,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이양 등 지방분권 관련 규제개혁을 위한 시·자치구 협업 추진
 - 등록규제 : 총 163건 / 조례 150, 규칙 8, 훈령 4, 고시 1
 - － 자치법규 규제 심사의 내실 있는 운용 : 안전·환경분야 등 좋은 규제 적용, 훈령·고시 등에 의한 신설 규제 심사의 강화(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 (적극행정 마인드 공유·확산) 교육·협업을 통한 역량 증진과 우수사례 전파
 - －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 워크숍 및 직원교육
 - － 규제발굴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2018년 규제개혁 추진현황 리뷰
 -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③ 시민 권익보호 및 소송업무 적극적 대응

- (시민 권익보호)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및 구제 확대
 - － 온라인 행정심판 홍보 강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심판청구 및 재결 편의 제고
 -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술심리, 주심제 지속 운영 등으로 권리구제 증진
- (적극적인 소송대응)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
 - － 「전자법률도서관(LawnB)」을 활용한 판례검토 및 체계적인 소송매뉴얼 배부안내
 - － 고문변호사 법률·송무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송무업무 전문성 강화
- (공무원 권리보호) 불합리한 징계 및 그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공무원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8. 여성 취·창업 교육 및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 ◇ 취·창업 교육 및 지원연계 활성화를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정친화 교육 확대 운영으로 건강가정 조성

1 여성 역량강화 및 취·창업 교육 운영 활성화

- (취·창업 교육 확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취·창업교육 확대 운영
 - － 취·창업 관련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강좌 강화
- (창업 실전 기회 제공) 예비창업을 위한 실전기회 마련 운영 확대
 - － 수강생 작품한마당 운영('19. 4), 수강생 창업코너 운영(수시)
- (취·창업 유관기관 연계) 취·창업 성공적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 － 새로일하기센터, 대전고용복지센터 등 구직등록 연결, 취·창업 상담의 날 운영(4개소)

2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가정친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가정 친화 교육)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교육 운영 활성화
 - － 가족친화 교육 : 우리가족 브런치, 집에서 즐기는 초대요리, 가족건강경락마사지 등
 - － 남성참여 교육 : 은퇴준비 삼시세끼요리교실, 영화로 배우는 인생 등
- (가족 참여 교육)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교육과정 운영
 - － 가족블로그&동영상만들기, 가족 웰빙 쿠키 만들기 등
- (부모교육) 부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 실시
 - － 부모의 감성코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의 역할 등

3 (북부)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 (취·창업 전문과정) 취·창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고급기술 훈련과정 운영
 - － 헤어숍 창업 전문 과정, 의류상품 개발 창업 과정 등 전문 과정 및 창업특강 추진
- (입주기업 컨설팅) 입주기업 체계적인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 여성창업 지원시설 입주기업과 전문 컨설턴트 1:1 연계 지원
- (입주기업 홍보) 입주기업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